

“국토균형발전 저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영·호남 4개 시·도지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 채택 인적교류 확대·지방분권 등 4대과제 적극 추진키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 영호남 4개 광역 시·도지사들은 26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4대 공동과제 실천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상생발전을 위한 4대 공동과제중 최대 현안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처였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영·호남의 상생을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자주조직·재정분권·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영호남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원의 통일기반 조성과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어리러이 수준이다”며 “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지방분권 수호에 영호남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상생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합과 통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선언문 채택에 앞서 4개 시·도지사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2.28 민주거거기념탑’을 찾아 공동 참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동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 상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충청과 강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대 수도권에 맞서 영호남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도골프장·영산재 팔겠다”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밝혀

양지문(58)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6일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수 경도골프장과 한옥호텔인 오동재·영산재, 해남 팜글호텔 등 관광사업 분야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광사업 분야 중 최근 매각한 골프연습장 외에 흑자를 내는 곳이 단 1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사장은 “공사의 자회사인 관광사업 분야는 도정 목표와 공사 설립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지역 자산인 진도 거북선유람선 운영을 제외하고 여수 경도골프장과 한옥호텔 2곳, 일반호텔 1곳 등 민간사업분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관광사업 전체를 매각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매각 방식과 관련해서는 “손절매를 감수하더라도 자산 재평가 후 매각하는 것, 가치를 증식해서 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자는 쉽지만 2~3년 후 자산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고, 후자는 위험성이 있어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이어 “무안 오통지구 개발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통지구에 대한 토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특보를 지낸 양 사장은 임원추천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인데 대해 “이 지사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 측근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면서 “추천위원들이 저의 개혁성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비수도권 지자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대구수성구 국회의원)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14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왼쪽부터)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내 2·28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화환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새누리 “광주 서구를 보선 중량급 모셔라”

공천절차 일단 보류 ... 정승 식약처장 영입 타진 중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6일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4·29 광주 서구를 보결선거 후보자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천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중량급 있는 후보를 추가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사실상 전라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이 30%대의 높은 지지율을 올렸던 선거구였던 만큼 당내에서는 중량급 있는 인물을 내세워 한번 더 ‘바람몰이’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정승 식약품안전처장 영입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정 처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구를 보결선거 후보 영입에 대해)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다. 현재 공직에 있는 만큼 공직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단 출마

의사를 부인했다.

정 처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농업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광주지역을 담당하던 뒤 현 정부들어 식약처장에 발탁됐다.

앞서 지난 19~23일 실시한 새누리당 4·29 재보결선거 공모 결과, 광주 서구에는 김군진 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과 조준성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 등 2명이 접수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의 전라공천에 해당하는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회의를 열어 서류심사를 하고 여론조사 경선규칙 등을 논의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

신문협 “광고총량제, 지상파 방송 몰아주기”

방통위·문광부에 공개 질의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 회원사들은 26일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 회원사는 최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따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를 따졌다.

또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

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리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질의서는 신문협회 회원사 47곳 중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문화일보를 뺀 44곳의 동의를 받아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로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 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시군 인사교류 갈등 확산

신안군 노조 “낙하산” 道 “1대1 교류”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인사교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보성군에 이어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도 전남도 낙하산 인사 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군노조는 26일 성명에서 “전남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일방적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안군은 부단체장을 포함해 4급(지방서기관)은 2자리(현원 4명), 5급(현원 32명)은 4자리나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남도 다른 시군 1~3명만 비교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위원장은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신안군 공직자가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면서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로 군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전남도가 초임 사무관(5급)을 군의 과장급 간부로 배치한 데 대해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인사 철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도와 시군 인사교류는 상호 협조체계 증진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향상을 위해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시장, 군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어 “앞으로 도와 시군 인사교류는 시장, 군수의 동의를 거쳐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기업투자의 최적지

미래창조형 목포대양산단으로 오세요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농업협동조합	목포음식업중앙회	전한국산림사업협회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주)행남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의정시원협의회	목포시정박포
천년타미로	(주)삼육에스	(주)현한	(주)서현	만호산인(유)	(주)하늘종합건설	해찬	목포임기독병원	목포임한병원	목포임시의료원